

광주 민주인권 보조사업 예산 퍼주기 없다는데...

시, 5·18 한시백일장, 4·19 재조명 등 미흡 평...5개 등급 나눠 지원 차별화 일부 사업 폐지 검토 속 "일괄적 잣대로 의미있는 사업 중단 안돼" 반발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이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의 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인권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정된 예산을 무작정 퍼줘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민주·인권 도시에서 상징성을 갖추고 열리는 사업만큼 일을 삭감은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3년도 민주인권평화국 내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를 내놨다.

성과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평가이며, 유지필요성 평가는 보조금 지급 이후 3년이 지난 뒤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사업 지속 여부 평가다.

광주시에 위촉한 외부전문위원 등을 통해 진행되는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사업계획·사업관리

사업성과 등을 지표로 삼는다.

문제는 광주시가 올해부터 각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라는 내부 평가 지침을 내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광주시는 기존에는 각 평가에서 미흡 이하 성적을 받으면 예산 증액 금지부터 삭감, 지원 중단 등 제재를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할 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5·18민주화운동 한시백일장' (서석한시협회 주관)과 '이북5도 광주시 사무소 운영' (이북5도광주시사무소)은 '매우 미흡'을 받아 사업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3·15의거, 4·19혁명 등 사업들이 예산 지원 중단 대상이 됐다.

'광주 3·15의거 민주주의 장송곡 대모 재현' (호남 4·19혁명단체 총연합회) 행사는 '매우 미흡'을

받아 예산 지원 중단 위기다.

'4·19혁명역사재조명' (4·19유족회 등), '4·19혁명공법단체운영지원' (4·19혁명공로자회 광주·호서지부 등) 등 사업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오월광주 창작오페라'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외국인 환자 및 의료인력 초청 지원' (사단법인 선한영향력) 등도 '미흡' 성적표를 받았다.

광주시는 일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재검토와 개선 조치가 우선 이뤄지며, 곧장 사업 폐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 또는 보조금 지원량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업 폐지 원칙이 나온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삭감이나 사업 폐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아직 특별히 제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미흡 사업 폐지' 원칙이 있는 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시의 평가기준상 의무적으로 최하등급을 줘야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갖추고 이뤄지는 사업을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해 예산을 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대부분 5·18 이외의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사업이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광주에서 추진하는 선양 사업 예산 대부분이 5·18 관련 사업에 편중돼 있어 3·15, 4·19 등 사건을 다루는 행사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3월 18일자 광주일보 7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인권 관련 사업 특성상 1년, 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도 많은데, 광주시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민주·인권 관련 사업은 더욱 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라며 "단체에 따라, 사업 성격에 따라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를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영 금지구역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다 목포에서 중학생 숨져

기말고사기간 중 친구들과 물놀이에 나선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목포시 죽교동 스카이워크 앞바다에서 중학생 A(14)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0여분만에 구조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군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기말고사를 마치고 같은 중학교 친구들 10여명과 바닷가에 놀러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해안가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며 해당 지점의 수심은 3.5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이 빠진 해안은 과거 유달 해수욕장이었으나 2006년 폐쇄됐고, 지난해 수영 금지구역으로 변경돼 수영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직 은행장이...캐디 성추행 혐의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30대 여성 골프장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전직 은행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20분께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는 카트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B씨의 허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천의 의미로 '허리가 가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만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A씨의 행위와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일행인 의사, 전직 고위 공무원 등과 골프를 치면서 여성 캐디가 있음에도 부적절한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 중 한 명은 이동 중 카트길에서 소변을 보기까지 했다.

B씨는 직장상사에게 SNS메신저와 전화로 피해를 호소했고, 직장상사는 직접 찾아와 A씨 일행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점과 A씨의 범행 전력이 없는점, 나이, 환경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식 재사용 "NO"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회원 300여명이 4일 오후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광주지역 식단의 전반재사용과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자정검의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사 따내려고 경쟁업체 견적서 위조해 제출

광주서부경찰, 4명 검찰 송치

공사를 따내려고 경쟁업체의 입찰 견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은 4일 광주에서 교통시설물 등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씨 등 4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교통시설물 수선 공사(2000만원 이

하) 4건에 대해 7개 경쟁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해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업체가 다른 사업에 제출한 견적서를 내려받아 입찰 가격을 자기 업체보다 높게 적고 직인을 위조해 해당 업체가 입찰한 것처럼 발주처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첩보를 입수해 1년여만에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금품선거 혐의' 장성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금품 받은 조합원·주민 16명은 '벌금 폭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장성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조합장과 공

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 조합장과 공범들은 선거운동 기간 매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조합원들에게 제 공한 현금의 출처도 A 조합장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금품을 제공해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A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농협 조합원들과 장성군 주민 16명에 대해서도 수수한 금품액을 고려해 30만~7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만~6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